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9.20(금) ~ 2024.9.26(목)

제공일시 2024 10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9.20(금) ~ 2024.9.26(목)

제공일시 2024 10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새 금융지원 네트워크 선보인다

- 한국을 포함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들이 주요 광물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자국의 개발금융과 수출신용 기관 등을 동원하는 새 금융지원 네트워크를 발표할 예정임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MSP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공개하고, 호주 광산업체 BHP가 지원하는 탄자니아의 대규모 니켈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도 약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MSP는 유엔 총회에서 발표할 공동 성명을 통해 새 금융 네트워크가 “자원개발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교환 및 공동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임

[\(연합뉴스 2024.9.23\)](#)

2. 미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 25곳에 30억 달러 지원

- 미국 에너지부는 20일(현지시간) 14개 주에 걸쳐 25개의 배터리 제조 부문 프로젝트에 30억 달러(약 4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공급망을 이전하고, 미국 내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 규칙 채택에 따른 고급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배터리 등급의 가공된 중요 미네랄, 구성 요소,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입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9.21\)](#)

3. “日, 대중 반도체 산업 추가 규제 동참 임박”... 도쿄일렉트론, 수출 통제 확대 전망

- 일본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추가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짐. 도쿄일렉트론(TEL) 등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의 첨단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장비 유지·보수 등 서비스 제공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제재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한 도쿄일렉트론의 실적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과 일본의 합의로 이르면 연내 도쿄일렉트론의 중국 수출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조선일보 2024.9.19\)](#)

국내 정책

1. 무선이어폰·손폰기 등도 재활용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임
-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됨

[\(뉴스티앤티 2024.9.24\)](#)

2. 환경부, 2억톤 규모 석탄 경석 산업자원 활용 기반 확립... 반입협력금 산정 구체화

- 석탄 경석이 폐기물 취급에서 벗어나 산업자원으로 활용되는 기반이 본격 마련됨. 올 연말 도입을 앞둔 반입협력금 금액 산정 방식이 구체화됨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힘
- 주요 개정 내용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반입협력금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 규정 마련 등임

[\(뉴스핌 2024.9.25\)](#)

3.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법으로 못 박는다

- 정부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
-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함
- 정부는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 의무화를 추진함
-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을 제도화함

[\(매일경제 2024.9.25\)](#)

글로벌 기업

1. '제2의 광산' 잡아라... 中, 자원 재활용 전문 국유기업 띄운다

- 중국에서 자원 재활용 산업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이 출범함.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과 시장을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25일 중국 평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기획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자오천신 부주임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자원순환이용그룹(中國資源循環利用集團)’의 설립을 지원하고, 국가적·기능적 자원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힘
- 8월 설립 준비팀이 본격 출범했고, 본사는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텐진시에 들어섬

[\(조선일보 2024.9.25\)](#)

2. 일본 IHI, 태양광 잉여 전력 '증기 변환' 시스템 개발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중공업 기업인 IHI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잉여 직류(DC) 전력을 탄소 배출 없는 증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4일 발표함
- 2024년 4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현 소마시 하수 처리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일조량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열에너지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기술임

[\(시타임스 2024.9.24\)](#)

3. 마이크로소프트, 美 원자력 사고 경험한 핵발전소와 20년 계약 체결

-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핵발전에 나섬. 22일 BBC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s Island) 핵발전소와 20년간 전력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함
- 이번 계약은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핵발전은 석유 발전 등에 비해 청정 에너지로 간주되기에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짐

[\(지디넷코리아 2024.9.22\)](#)

4. 일본 화학사 아지노모토와 프랑스 다농의 파트너십, 유제품 메탄 배출 30% 줄인다

- 일본과 프랑스의 거대 식품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손을 맞잡음. 19일(현지시각) 일본 식품 및 화학기업 아지노모토(Ajinomoto)와 프랑스 유제품기업 다농(Danone)은 유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배출량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함
-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아지노모토가 개발한 아지프로(AjiPro®-L)에 있음. 로이터는 아지프로를 메탄 저감 첨가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메탄 배출 감소 효과를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도함

[\(임팩트온 2024.9.23\)](#)

국내 기업

1. SK온·포드·에코프로비엠, 캐나다 양극재 합작공장 공사 중단 한 달 만에 재개

- 에코프로비엠과 SK온, 포드 간 캐나다 퀘벡주 합작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됨
- 작업 정상화 속도를 내며 오는 2026년 완공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림
- 에코프로비엠 캐나다법인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우리는 베캉쿠아에 있는 양극재 공장 건설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함
- 이어 “근로자와 장비 동원이 이미 진행 중이며, 9월 말까지 현장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더구루 2024.9.25\)](#)

2. LG전자, 차세대 공조 기술 위해 글로벌 HVAC 컨소시엄 출범

- LG전자가 냉난방공조(HVAC)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럽·미국·아시아 연구진과 협력을 확대함
- 다양한 지역의 기후 특성 등을 고려한 차세대 제품·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는 것임
- 24일 LG전자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구축한 차세대 히트펌프 기술 개발 컨소시엄 핵심 연구진을 서울로 초청해 글로벌 히트펌프 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밝힘

[\(중앙일보 2024.9.24\)](#)

3.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특허 확보... 英 프라이메탈스와 추가 파트너십

- 포스코가 영국 플랜트 건설사 프라이메탈스 테크놀로지스(Primetals Technologies, 이하 프라이메탈스)와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협력을 강화함
-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추가 협력 계약을 맺고 지적재산권 문제를 마무리 지음
- 24일 프라이메탈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7월 포스코와 수소환원제철 모델인 하이렉스(HyREX : Hydrogen Reduction) 데모플랜트 설계에 협력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 양사가 하이렉스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포스코에서 갖기로 합의함

[\(더구루 2024.9.24\)](#)

4.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이수페타시스와 AI용 동박 공급 나선다

- 롯데케미칼의 동박 제조업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이수페타시스와 인공지능(AI)용 동박 공급에 나선다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수페타시스와 AI 및 네트워크 PCB 기판 핵심 소재인 초극저조도 동박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함
-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가속기, 서버 등에 적용하는 고성능 및 고다층 네트워크 PCB 기판에 필요한 초극저조도 동박의 개발 협력과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함

[\(한국경제TV 2024.9.23\)](#)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9.20(금) ~ 2024.9.26(목)

제공일시 2024 10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국, '안보 위협' 중국산 커넥티드카 SW 금지... 한국 영향은?

-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왔음
-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음
- 미국 상무부는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 소프트웨어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제품을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해 일명 '스마트카'로 불림. 최근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은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최근 출시된 차량은 모두 커넥티드 차량으로 볼 수 있음
- 규정은 승용차, 트럭, 버스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지만,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나 채굴용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번 규정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러시아보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란 분석이 나왔음. 중국 측은 "중국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즉각 반발했음.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기업에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커넥티드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음. 규정은 금지 대상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유, 통제, 지시하거나 관할에 두고 있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정의했음
- 이 금지 조항은 차량을 미국에서 만들어도 적용됨. 규정은 중국 기업이 소수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이라도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중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해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규정을 우회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음
-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판매가 금지됨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오늘날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등 인터넷에 연결된 기술이 있다"며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적대적 국가는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의 사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번 규정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커넥티드 차량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됨
-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의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함. 다만, 미국 정부의 조치가 경쟁자인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관측도 나옴

- 산업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정안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자동차 업계와 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응 회의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번 규정안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에 대해 평가했다.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규정안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 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임팩트온 2024.9.25\)](#)